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2년 3월 15일
 609-809부산시금정구개좌길14(진성주차장)
 FAX. 051-522-7118
 E-mail.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계간8호 발행자 편집자 : 이상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42번길 35-9 401호 / 신고번호 : 해운대구 바00002 / 신고일 2011.05.11 / 인쇄 (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소식지 8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7호를 내고 3개월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늦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내용을 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 합니다. 독도 수호 운동에 참여하세요. 도와주시면 좀 더 좋은 소식지가 됩니다.<편집자>

日 도쿄, 고교 교과서에 '韓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도쿄도가 올 4월부터 필수적으로 가르치기로 한 공립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전날 도쿄도가 만들어 고교에 나눠줄 '에도(江戸.도쿄의 옛 명칭)에서 도쿄로'라는 일본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관한 기술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포함된 부분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국제법상 유효한 근거 없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도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표현을 굳이 일본사 교과서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 "일본이 직면한 과제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지리와 역사 관련 3과목 중 세계사만 필수 과목으로 정해 놓았으나, 도쿄도는 2012년 4월, 가나가와현은 2013년 4월부터 일본사를 필수화할 방침이다. 도쿄도 등의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검정도 받지 않는 만큼 앞으로 독도 등에 대한 표현이 한층 거칠어질 개연성이 있다.<chungwon@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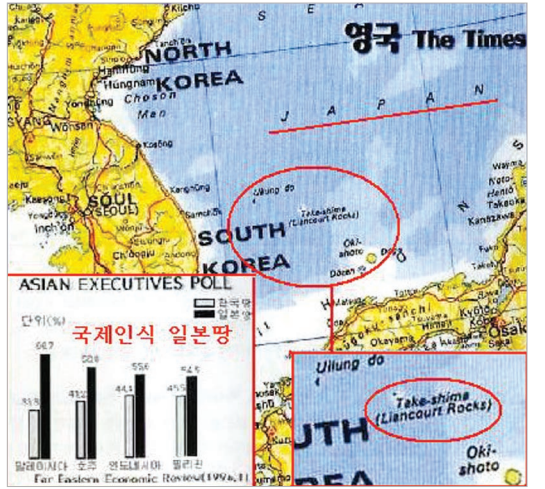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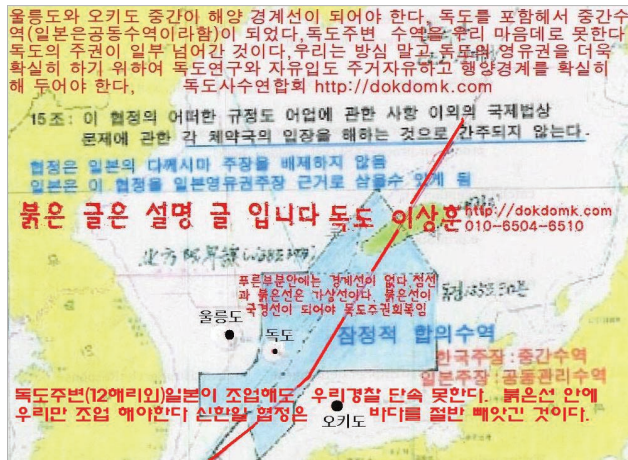
독도에는 '독도는 우리땅'이 없다

1982년에 만들어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노래. 그리고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쳐 부르는 노래, 1996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5절까지의 가사가 실려 있는 노래, 2005년에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정광태에게 대한민국 화관문화훈장까지 수여한 우리의 노래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를 기념하는 노래비를 독도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정부가 허가 안하는 것은 꿈수인가? - 이병렬 (소설가. 문학박사) 글 중에서
 <지면상 글을 중간만 올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독도가 위험합니다.(일본이 탐내며 뺏으려 합니다) 70%넘어감

독도 옆 푸른 부분은 일본과 공동수역(절반의 주권)

독도명칭은 다케시마(독도 단독표기는 1.5%)



위신 한·일 어업협정도에 독도가 푸른 부분 안에 있다. 푸른 부분은 한·일 공동수역이다. 독도마당이 고동 것이 된 것이다. 다른 나라지도에 독도 1.5%뿐. 다케시마가 95%다. 서류상 일본 땅 된 것이다. 어업협정과 지도상 독도를 지킬 수 없다. 독도 주인들이 독도를 지키려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당신도 서명운동 많이 하면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정부의 정책은 여론 따라 바뀌게 된다. 힘 있고 재력 있는 유명한 단체가 서명 운동하는 것 보면 "독도를 지키자" 한 줄 쓰고 서명 받는다. 정부의 눈치를 본다. 우리는 눈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같이 서명운동을 하여 독도 정책을 바꾸자. 독도연구를 많이 해서 일본의 주장을 물리쳐야 하고 사람이 살게 만들어 많이 살아야 일본을 이깁니다.

독도 주변 바다의 주권을 전부 찾아야 독도가 안전합니다. 뒷면 복사해서 서명운동 해 보내주세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금사입구 진성 주차장 내)우609-809

H·P :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ds5ean@naver.com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보장해 주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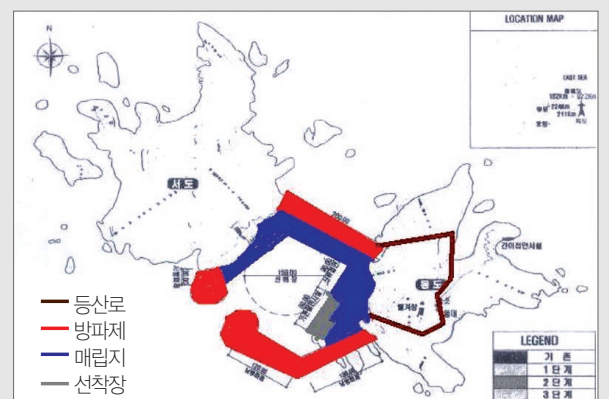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독도연구를 많이 하면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관련 단체에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독도에 사람이 살면 국제법으로 해도 더욱 유리 해 집니다. 문화재관리법으로 못 살게 합니다. 회원 많고 힘 있는 단체가 서명운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 개발 (안)

동도와 서도는170m정도 거리가 된다. 붉은 곳은 방파제며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나 주택지를 만들자는 개발(안)이다. 독도에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서 독도 주민이 장사가 되게 하자 는 것이다. 개발안은 강항희 회장의 것인데 독도 이상훈 수정한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남연우 홍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의 단체장소개 제가 행사취지를 설명하고 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박춘호 사무처장님의 대회사 도덕국민운동 이훈목사님의 성명서낭독, 신옥군 본부장님의 격려사, 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연제구지회 사무국장님의 결의문 구호제창, 독도해병지킴이 박영춘 본부장님의 만세 삼창 이상훈 회장의 독도칙령 설명 독도사수연합회가 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에 드리는 감사패 전달을 끝으로 기념 촬영하고 단체장님들은 일본영사관에 성명서 전달하고 회원님들은 독도사랑문화회 우명주회장이 제공하는 빵을 먹으며 헤어지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수신(차) 在釜山日本國總領事
참 조 제 목 한국 땅 독도 일본 자칭 "죽도의 날" 건

1.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와 친선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단체는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독도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이 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독도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여 한·일 친선이 저해 단계의 뜻을 전합니다.
3. 우리 단체는 일본 정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독도 침략 음모를 막고 지키며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민간단체와 외국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4. 우리 단체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별지에 붙이오니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민간단체에도 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도덕성 회복 부산본부

독도사수연합회

사무처장 이 덕 준 운영위원장 윤 승 태 회장 이상 훈
협 조 자 시 행 독사연 2012. 2. 22 접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5-22 번지 금사입구 (진성 주차장 내) 우편번호 : 609-809
FAX : 051-522-7118, HP : 010-6504-6510, E-mail : dsSean@naver.com

일본 자칭 "다케시마 의 날" 규탄 성명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여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로 구성)을 신라에 복속시킨 신라의 후예인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을 계기로 당시 조선국과 일본 간 수년간에 걸친 협의의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된 일본의 서계가 조선국에 전달되었다.
1877년 3월 29일자 일본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일본내무성에 시달한 공문내용 달변에서도 "다케시마(울릉도)와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회신하였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포츠담선언에 연합군이 지정한 섬 위는 일본 땅이 아니었다 했는데 연합군이 일본 땅으로 지정한 섬 중에 독도는 없었으며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로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하였다.
일본정부는 동 지령을 법제화하였으며,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제2조에 명문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부속도가 아니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에 국제법상뿐만 아니라 일본법령상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독립된 군으로 승격시켜 군수를 두고 1900년 10월 25일에 울릉군수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하라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하고 동월27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각국 공사에게 우리 영토임을 확인 시켰다.
일본의 역사학자들과 교원노조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정부 관료들은 학자들보다 잘 안다고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하느냐?
시마네현의 자칭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만들어 기념행사를 하는 것을 한국 국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히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 이란 관계 부분을 당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22일

독도사수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부산광역시지부, 도덕성회복 부산본부, 독도사랑문화회, 독도해병지킴이, 독도연합총본부.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장 윤승태



상 감사패 전달
다운승태 운영위원장님



상 박춘호 사무처장님
다운독도 이상훈 회장님



상 신옥군 본부장님
다운이훈 목사님



상 자총연제지회 사무국장님
다운격려하신 기관 간부



상 성명서 전달
다운영사관 앞



사후 격려해 주신 두분 기관간부님



본회 후원금을 주신 분

1	방성필	부산시북구덕천동	90,000원	21	이영희	진구 연지동	6,500원
2	박복도	부산시기장군기장읍	50,000원	22	허공삼김고요		50,000원
3	김명호	부산시 전화	10,000원	23	조남용	충북지회장	227,000원
4	오영순		4,000원	24	택시손님들		20,000원
5	박기욱	부산시진구전포3동	5,000원	25	택시손님 60살 女		100,000원
6	이월자		4,000원	26	서동진	부산북구만덕동	10,000원
7	박이문		8,000원	27	이상건	북구덕천동3동	10,000원
8	서하수	(다독사에)	13,000원	28	신일석	동구초량1동	10,000원
9	xxx	뉴비치 아파트 507동	10,000원	29	인승태	동래구명장2동	10,000원
10	김동미	부산시연제연산2동	23,000원	30	오세돈	금정구 검사동	10,000원
11	신영태	서울시노원구중계동	7,000원	31	택시손님들	70,000원	
12	이창호	부산진구 초읍동	7,500원	32	박노영	인천시 남동구	300,000원
13	서령자80세	김해시서상동	100,000원	33	박노분	강원도 삼척시	매월송금
14	윤청희	사상구학장동	6,800원				
15	이은애	부산수영구 망미동	5,000원				
16	최상윤	부산사하구괴정3동	5,000원				
17	김미도	부산서구아미동	50,000원				
18	문자영	경북구미시	13,000원				
19	송지영	대전시	10,000원				
20	강정숙	부산진구부암동	35,000원				

* 송금 하신분 외에도 후원금 내신 분들 있는데 물품을 기증 하신분도 있으나 기억을 못 하여 못 올립니다. 후원하시거나 물품을 주신 분 중 기록이 안 된 분은 연락바랍니다. 5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감사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바랍니다.

편집자

독도사수연합회 새 회원 명단

- 곽현옥(고문)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백미경(운영위원) 경남 창원시
- 박대희(운영위원) 부산시동래구온천동
- 유정영(운영위원) 부산시북구 만덕동
- 박노영(운영위원) 인천시 남동구



독도의 눈물

글 · 이지산 (지면상 홈페이지에 있음)

독도가 울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얀 거품을 입에 물고 기절 할 듯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가 독도를 울렸을까요? 일본입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대한 독도가 반만년을 동해바다에서 한민족을 쓸쓸히 지켜왔건만 우리는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약소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독도를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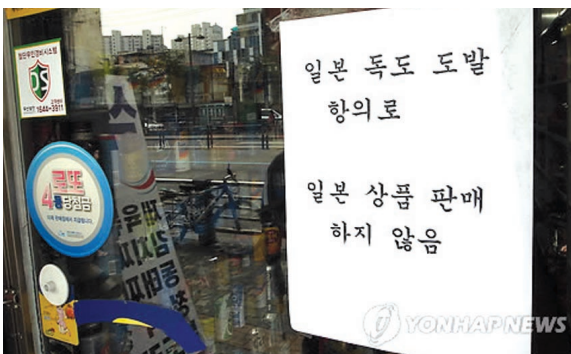


그러므로 일본은 지난 과거에 일본이 제국주의 적 의도로 한국을 병합하여 수탈(收奪)한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 자체가 당시의 국제법적 기준에서도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근원적으로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이 그들의 한반도 침략의 불법성과 식민통치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영토권 주장을 당연히 즉시 철회해야만 한다. 즉 일본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법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못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과거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적법한 것이었으며 지금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確認)시킴으로

써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은 근원적으로 배제(排除), 시정(是正)될 수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일본은 이미 그들이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는 것이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을 극명하게 들어내고 입증하는 가장 명백하고 전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의 한반도 지배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부당(不當)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지금까지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당시의 법적 기준에서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었다는 법적 입장(소위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유효부당론’)을 견지할 수 있는 한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완강한 영토권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유효부당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의 분쟁이 지금까지 이처럼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일본 측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유효부당론’을 법리상으로 정당하게 척결(剔抉)시키지 못한 한국 국제법 학계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지나친 일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 독도사수연합회 홈페이지 교수논문에서 본 논문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일본, 한국 독도 실효지배 더 이상 못 본다?



독도도발 항의로 일본상품 판매 않는 수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방안이 부상한 것은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실현될 경우 49년 만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한국이 이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전했다.또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분쟁화가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에 오랫동안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 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아서 한국이 ‘일본 영유권 주장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풍토를 정착시켜왔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쓰모토 다케야키 외무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美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유”?

미국인도 다니는 뉴저지일본인학교...
교포, 시정요구 소송 최종편집 2011-09-26 10:15:02

재미동포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미국 사립학교와 해당 교육청, 그리고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재미블로거 안치용씨가 26일 전했다.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뉴저지주 리버데일에 사는 재미동포 최좌성씨는 지난 21일 뉴저지주 교육부와 뉴저지주 오클랜드 교육위원회, 그리고 뉴저지 일본인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뉴욕 한인법무법인 김앤배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며 왜곡 교과서 사용 중지, 정치적·선전적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뉴저지주 교육부에는 교과서 지원금 및 보육서비스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뉴저지 일본학교는 뉴저지 교육부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기관으로 유치원생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정규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일본인은 물론 미국인 등 누구나 입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 일본인학교가 사용 중인 교과서는 2006년 일본정부 승인을 받은 ‘공민교과서’로 이 책에는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배하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는 본래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일본의 영토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지면 관계상 중간에서 마침 홈페이지 참고바람)

독도관련문답

- 문: 독도우리 땅인데 왜 지키려 하나?
답: 독도 일본이 뺏으려 하기에 지키려 한다.
- 문: 일본이 뺏으려 한다고 우리 땅을 뺏기나?
답: 조선시대에 빼앗긴 땅이 지금 현재 영토보다 더 크다. 간도, 대마도, 녹둔도 등이다.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바다 공동 것이 되었다. 독도바다 절반 뺏긴 것이다.
- 문: 독도를 국가가 지켜야지 왜 민간이 지키나?
답: 민간이 직접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책을 고치게 해서 독도를 지키려 한다.
- 문: 정책을 고치면 독도 지켜지나?
답: 정부가 독도에 사람을 못 살게 한다. 사람이 살면 독도 지켜질 확률이 높아진다. 독도 연구를 많이 하면 이론과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정부가 안 하기에 국민의 요구가 심하여 여론이 되면 민심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할 것이다. (선거 때 표 의식)
- 문: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사수연합회가 독도를 지킬 수 있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답: 첫째로 국민이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말로만 관심 있고 실제로 관심 없다고 본다. 3% 정도 검색 했다는 분에게 아는 것 말하라면 못 하는 분이 대다수이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정치인이 독도정책 많이 내고 언론은 더 많은 기사를 낼 것이다. 저의 단체에 힘을 주면 힘이 생긴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010-6504-6510)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 사항			
년납 ()	월납 ()	회비	자동 : 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시납 : 현금 ()

외교부 문건에 '일본해' 표기 수두룩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강병철 기자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우리 정부의 외교문서와 재외공관 웹사이트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80년 외무부(구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일본해 투기, 1980' 전문을 입수했다. 'JAW-10672' 번호가 매겨진 본문에는 당시 주일 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착신전보가 담겨 있는데 "한국이 저레벨의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해에 투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서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번역해 보고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을 여과없이 객관적 사실인양 기술하고 있다.

1980년은 우리 정부가 동해 표기를 위한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도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게시물에도 일본해란 표현이 여과없이 등장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의 검색코너에서 일본해를 키워드로 입력한 결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뉴스가 등장했다. 그중 '정부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과 '언론보도 해명' 등 2건은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나 지난 4월 21일자로 게재된 일본 니가타 주재 총영사의 현지 언론 인터뷰에는 총영사가 일본해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문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것이다. 외교통상정책 코너에도 중국 언론보도를 정리해 통상기획홍보과에서 올려놓은 게시글이 5건이 확인됐다.

일본 주재 공관의 게시물에도 일본해란 표현이 수두룩했다. 주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일본해로 검색한 결과 '일본해 연안 동북자동차도 濰海터널공사'란 2007년도 6월 4일자 게시물이 검색됐다. 일본 동북지방정비국의 입찰정보를 담은 이 글은 동해를 병기조차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주장(일본해)을 그대로 올려놓았다. 주니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문에는 일본해라고만 표기한 글이 227건이나 됐다. 그 중 관리자가 인용 없이 자체적으로 올린 글만 해도 28개였고 본문과 함께 글 제목에 일본해가 등장한 것만 해도 '일본해 횡단항로 금년여름 취항 절망적' (2008년 6월 3일), '일본해 횡단항로 내달 시범 운항' (2009년 2월 23일) 등 16건이나 됐다. 모두 일본 현지 언론보도를 번역했다고 출처를 밝혔거나 회사·단체명 등 고유명사의 일부로 일본해가 사용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일본내 다른 총영사관에서도 일본 정부의 발표자료와 한인 주간정보지, 관광지 정보 등을 게재하면서 동해란 표현 없이 일본해라고 쓴 글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재외공관 게시글의 일본해 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

日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 공개 4년 전 미 외교전문서 확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양국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미묘한 시점에 터진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측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서를 보면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 문제는 이후 국내에서 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백모씨 등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냈다. 위키리크스는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서를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참사관은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와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사회 기자 tingco@kyunghyang.com>

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니가타 총영사관 측은 "일본 언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사실확인 뒤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재외동포 등 각계각층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동해란 명칭을 되찾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외교부 스스로 동해를 병기조

차 하지 않고 일본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민간의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며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란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한 글이더라도 우리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동해로 정정해서 올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독도사수연합회 후원 해 주신 후원사



신우정공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대표 신재식(용기)
HL5 JQN

- 사 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활마톤 난간대
- 배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대표 변리사 조철현

우리 특허 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나라사랑

- 1. 독도모형
 - 2. 저금통기능
 - 3. 향수통기능
-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 됩니다
010-9901-2853



독도소식지 8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후손이 사용해야 할 독도입니다. 당신이 협조를 하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윤예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